청년 일자리 사업·고용위기지역 목포·영암에 중점 투입

광주·전남 정부 추경예산 1080억 어디에 쓰이나

청년창업·취업 등 역점 지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100억
남해안 철도 건설 100억 반영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21일 약 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예산에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광주 159억원, 전남 921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날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3조8317억원으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이날 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했으며, 추경 재원은 빠르면 22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45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 추경안을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됐다. 반면에 교육은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은 14억원 각각 순감됐다. 사업별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 삭감됐다.

◇**광주시**=일자리 사업 등 모두 11건의 사업에 159억900만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 8건에 31억6000만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000만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설 100억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원 등이다.

일자리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마을기업 청년참여자 인건비 지원 3억6000만원,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6억7500만원, 청년드림 13억1000만원, 청년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억원 등이다.

◇**전남도**=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00억원, 희망근로 지원 19억원,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사업 1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목포시·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고용위기지역 예산은 100ft급 대형요트 개발 49억원, 지역투자촉진 37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36억원,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억원, 조선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운영 16억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14억원 등이다.

이밖에 목포·영암지역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특히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마지막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원내대표들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역 주요 SOC 예산으로는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남해안 철도 건설 1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원, 항구적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영산강 Ⅲ지구) 80억원, 신안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건설 60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2억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22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16억원, 배수개선 사업 11억원, 어류 등 서식장 조성사업 8억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6억원 등을 추가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이 트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전남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며 "광주·전남 지역 예결위원 및 의원 면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등 전남도의 총력 대응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與, 대통령 발의 개헌안 24일 국회 표결 처리키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도 요구…야당은 개헌안 철회 요청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 역시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안 철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한 데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헌법,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 시한 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관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그동안 국회가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이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헌안 의결 및 국회의장 선출은 여야 간 합의 대상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처리 문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충돌할 경우 더 중요한 안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도 감지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문제는 야당의 분위기를 봐가며 좀더 당내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원 10명중 7~8명 물갈이

6·13 지방선거 재적의원 22명 중 6명만 재도전

74% 초선으로 채워질 듯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70% 이상이 물갈이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옛국민의당의 분당에 따라 출마를 접은 사례도 늘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의회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의원은 최대 6명(27.2%)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반재신(북구1), 김동찬(북구5), 김용집(남구1), 민주평화당 박춘수(남구3), 문태환(광산2), 바른미래당 김옥자(광산5), 민중당 이미옥(광산2) 의원 등 7명이 출마한 가운데 광산2 에서는 현역 2명이 맞붙는다.

앞서 민주당 주경님 의원과 평화당 유정심 의원은 각각 서구4 선거구와 여성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제8대 의회에 새로 입성할 초선(연속 선수 기준)은 17명으로 전체 74%에 이른다.

이는 선거구 조정으로 1명(광산5)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비율이다. 7대 의회 초선 비율(68%)보다 더욱 높아졌다. 7대 의회에서는 재선 7명, 초선은 이보다 갑절 많은 15명이었다.

올해 광주시의원에 출마한 현직 시의원 7명은 모두 초선이어서, 3선 의원 탄생은 사실상 물 건너가 재선 의장, 초선 부의장, 초선 상임위원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전문성과 경륜 부족이 걱정되지만 젊은 의원 도전자가 많아 의회에 활기가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시의회 개원 이래 3선 의원은 모두 9명 탄생했다. 안성례, 이춘범, 김명민, 전갑길, 신이섭, 반명환, 김후진, 손재홍, 나종천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이춘범, 반명환 의원은 의장을 역임했다. 재선 의원은 28명, 초선은 73명 배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